

27-2. 인천고등법원 유치

▶ 신규여부 **신규** 계속 ▶ 사업시기 임기내 **임기후** ▶ 예산투자 예산 **비예산** ▶ 사업주체 인천시 **국가** 민간

○ 정책목표

-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
- 우수한 법률 인력 양성 기반 마련,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

○ 필요성

-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
 - 인천지법 관할(인천·부천·김포) 인구는 10년간 7.7% 증가('11년 393만명→'20년 424만명)
 - 사업체('13년 25만개→'19년 30만개) 및 종사자('13년 123만명→'19년 144만명) 증가
 - 인천고법 항소심 건수(인천고법 설립 가정 시, '20년 기준)는 대구고법보다 많음
 - * 서울 18,815건, 수원 3,540건, 부산 3,592건, 광주 2,532건, 대전 2,277건, 인천 1,844건, 대구 1,812건
- 서울고법 비대화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(재판청구권, 평등권)
 - *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 : 서울 109.1, 부산 45.7, 광주 43.8, 대전 41.1, 수원 41.0, 대구 35.8
-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서울고법까지 이동 시 장시간 소요
 - * 대중교통 96.1분(강화 171.8분), 승용차 71.5분(강화 94.5분) / 옹진군 2일

○ 추진실적

- 2022. 7. ~ 9. : 연구용역*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
 - *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(인천연구원, 48,500천원, 2022. 4. 8. ~ 10. 7.)
- 2022. 10. :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한 유치 타당성 언론 홍보(신문보도 42건, 방송 2건)

○ 향후 추진계획

-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* 통과 지속 건의
 - *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'20. 6월 지역국회의원 발의)
-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인천고법 유치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회 및 정부기관 방문, 대시민 홍보
- 지역정치권, 법조계,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천고법 유치 활동(서명운동, 토론회 등) 추진

